

社會 상황의 變化와 韓國大學의 位相

林 榮 一

(慶南大 社會學科)

1. 韓國 大學의 現實

韓國大學教育協議會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발표된 최근 한국 대학의 물질적 敎育 환경에 대한 調查報告書들은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서도 새삼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보여 주고 있다. 經濟的으로는 이제 조단간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불에 달하여 가히 先進國의인 면모를 보여 주게 될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經濟成長의 靑년 役割을 수행한 良質의 고급 勞動力人들을 공급해 온 주된 기능을 맡았던 한국의 대학들이 내용적으로는 거의 瀕死狀態의 敎育 환경에서 시달리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대학들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유사하거나 우리보다 다소 뒤진 경제 발전의 수준에 있는 여러 新興工業國들, 심지어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의 까마득한 後進國家들의 대학과 비교해서도 우리의 대학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營養失調 상태에 있다. 大學敎授 1인당 학생 수라는 가장 概括的인 指標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대학은 심지어 중·고등학교의 경우보다도 劣惡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각지의 수 많은 대학 울타리 안에는 이제 100만 명이 넘는 '大學生'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대학의 울타리 밖에서는 그나마 入

學의 機會조차 얻지 못하여 아까운 젊음을 入試 戰線에서 끊임없이 消耗하고 있는 수십 만의 '입학 待機者들'이 초조하게 배회한다. 그 속에서 우리의 대학은 대학 '간판' 하나만 가지고도 넘쳐나는 志願者들을 주체하지 못하여 입시 철마다 '즐거운 흥역'을 앓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의 대학과 대학교육은 덩치는 엄청나게 크면서도 속으로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체질의 '肥滿 症患者'가 되어버린 셈이다.

한국 대학의 이러한 현실은 물론 우연한 결과는 아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그릇된 국가의 文教政策,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大學 經營主體들의 放漫하고 便宜的이며 恣意的인 大學 運營의 필연적인 결과인 셈이다. 최근의 여러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矛盾點들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국가 문교 정책의 轉換, 특히 대학에 대한 국가의 '社會的 投資'의 擴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 대학교육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私學의 열악한 財政問題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없이는 이러한 상황의 克服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누누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오늘의 우리 대학교육의 深刻性이 있다. 즉, 국가 교육 재정의 확대 그 자체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대

학교육이 단순히 物質的 資源의 '投資' 만으로는 결코 치유되기 힘든 痼疾的·體質的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보다 심각한 自己反省과 뼈를 깎는 '自救的 努力' 이 절실히 요구된다.

2. 教育理念의 不在 혹은 失蹤

現代社會에서의 대학은 더 이상 사회 현실로부터 거리를 둔 고고한 '象牙塔' 일 수는 없다. 이미 대학은 '사회 속의 대학'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多樣한 사회적 要求들에 부응하는 그 고유 機能의 고도한 발휘를 자기 存立의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學問과 科學의 끊임없는 연찬과 전수 및 思想·理念과 文化的인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의 技術文明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대학은 의연하게 사회의 고도한 知識蓄積의 中心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素養과 資質 및 能力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高級人力들을 적절하게 養成하고 普及하여야 할 기능이다. 이 두 기능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사실에 있어서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前者이다. 전자의 기능은 후자의 기능에 대한 중차대한 基盤이 되지만, 그 逆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대학은 이제 더 이상 학문과 과학의 研究中心地도 아니며, 우리의 대학이 사회에 공급하고 있는 인력의 대부분은 '大學卒業資格證'을 가진 평범한 豫備就業者(就業待機者)들에 불과하게 되었다. 人文·社會科學과 自然科學의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심오한 과학적 연구의 중심지는 대학이 아니라 대학 외부의 국가 기구들과 거대 자본이 경영하는 기업체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모든 대학인들은 이미 국가 및 자본의 물질적 투자가 대학 내의 研究機關이나 實驗機關보다는 그들이 직접 관장하고 통제하는 기구들에 집중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

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研究'와 '講義'의 현장은 차마 외부인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처참한 것이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대부분의 강의는 수십 년 동안 의연히 '백묵과 칠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나마 대부분의 강의는 과도한 講義時間과 과밀한 受講人員에 쫓기면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강의도 예외는 아니며, 그나마 마련되어 있는 낡은 실험 기자재들은 그 수도 태부족일 뿐 아니라 단순히 보관하고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운영비 때문에 거의 방치되거나 사장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대의 複雜한 技術文明이 요구하는 有能한 고급 인력의 供給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無望한 일이다. 현재와 같이 불균형적인 교육 현실에서 다행히 우수한 '머리'의 학생들을 공급받게 된 극소수의 '특정'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學部 수준에서나 大學院 수준에서 대부분 '下向平準化'된 평범하고 '모나지 않은' 社會人的 輩出 정도가 교육의 '最大目標'가 된 지 오래이며, 그나마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가능성 있는' 소수의 학생들도 하향 평준화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조기에 挫折하거나 '規格化'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대부분의 대학은 사실상 일종의 '職業學校'로 변해 버린 지 오래이며, 대학의 도서관마다 넘쳐나고 있는 학생들은 '學問과 科學'과는 애시당초 무관한 이런 저런 '資格證' 수험 준비자 혹은 '入社試驗' 준비자들에 불과하다. 거의 모든 대학이 액자에 걸어놓고 있는 眞理·自由·創造 운운의 교육 이념들은 이미 낡고 낡은 걸치레 口號에 불과하고, 학생들은 좁은 '就業市場'에 쫓기는 애늬은이 현실주의자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시때때로 난무하는 화성기의 口號와 노래, 돌맹이와 화염병과 최루탄의 亂舞 속에서 어렴풋이 그 냄새를 풍길 뿐이다.

3. 大學의 批判的 機能의 喪失

한국 대학의 이러한 현실은 국가의 장기간에 걸친 직접적인 教育統制에 우선 1차적인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 市民社會의 未發展과 그에 따른 國家-市民社會의 영역 分離의 不在가 물론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교육을 국가 발전의 道具 정도로 생각한 역대 軍事政權의 強壓的인 통제적 教育政策은 결국 교육 문제를 곧 국가정치적 문제로 귀결되게 하는 결과를 빚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은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교육 통제에 自發的으로 順應하면서 사회 속에서의 대학의 包括的인 기능을 포기하고, 극단적으로 道具主義化한 단순한 人力供給 기능에만 자신의 역할을 限定시켜 온 것이다. 그 속에서 대학은 量的으로는 엄청나게 팽창하여 심지어는 간판만으로 시작한 대학이 온갖 特惠에 寄生하여 거대한 學園財閥로 성장한 사례가 다수에 달할 정도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學歷不平等構造의 是正을 요구하기보다는 그에 便乘하여 파급된 教育需要의 獨占供給者의 지위를 마음껏 누리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러한 까닭에 오늘날 肥滿症에 걸린 한국의 대학이 그 體質改善에 필요한 물질적인 투자의 요구를 사회에 제시하더라도 결과는 항상 냉담하거나 심지어는 일반인들의 의혹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80년대의 소위 '教育改革措置'는 군사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 중에서도 가히 최악의 것이었지만, 한국의 대학 경영자들은 이를 校勢擴張의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대학은 단기간에 2~3 배의 定員 증가의 好景氣를 누릴 수 있었고, 막대한 등록금 收入의 대부분을 학교 敷地의 확장과 건물 증설, 나아가 濫發된 '分校' 설치 허가를 틈탄 不動產 資産의 엄청난 확대의 기회에 쏟아부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학생들의 소위 學園民主化 운동의 증폭 과정에서 한국 대학의 '外華內資'의 실상이 빙산의 일각이나마 드러나 일반인들에게 충격과 우려를 안겨 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상황의 窮極的 責任은 사실 국가나 사회보다는 大學 그 자체에 있다. 사회와 대학과의 관계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미 불가분의 관계, 물과 물고기의 관계가 되어 있지만, 대학은 어느 경우이나 국가 사회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

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대학의 '批判者的 立場'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대학이 이러한 위치를 喪失한 지는 이미 오래이며, 따라서 激變하는 사회 현실과 國際環境의 變化 속에서 우리의 대학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操舵手'의 역할과 思想·理念的 求心點의 제공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사실은 냉엄한 自己批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비판적 기능의 상실은 곧 국가 사회에 대한 대학의 '權威'의 상실을 초래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 전체에] 만연하고 있는 온갖 그릇된 풍조 속에서[대학은 아무런 道德的 指導力의 求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크게 보면, 卑俗化된[資本主義社會에서의 物神崇拜의·道具主義的] 價値에 의하여 合理的 理性과 科學의 權威가 壓殺되는 과정의 일환인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과 학문의 중심지, 이성과 지성의 권위의 중심지이어야 할 대학 자체가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도구주의적 가치 전파의 중심지로까지 轉落하였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4. 韓國 大學의 學問的 落後와 理念的 閉鎖性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에는 대학 내·외의 여러 조건들이 함께 작용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대학이 아직도 痼疾의 으로 안고 있는 자체의 학문적 폐쇄성이 미친 害惡은 참으로 크다. 특히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強壓的인 軍事政權에 맞서 民主化를 추진하는 가운데 思想·理念的으로 엄청난 動搖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학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準備'도 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는 앞장서서 그러한 변화를 拒否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조차 학생들에 대한 아무런 理念的·道德的 指導力을 발휘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으로 주어져 있다. 우리의 政治的·社會的·民族的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憤怒와 抵抗의 물결이 드세어지는 속에서 우리의 대학 강의실은 여

전혀 고답적인 高談峻論이나 심지어는 시대착오적인 冷戰的 黑·白 論理를 되뇌이는, 아니면 枝葉末端的인 ‘受驗科目’ 교과서만을 낭독하는 피곤한 목소리만 울릴 뿐이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教科課程 改編’을 위한 노력 가운데에서도 격나타하게 드러나고 있듯이¹⁾,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국가 사회가 요구하고 학생들이 갈망하는 다양한 종류의 深度 있고 폭 넓은 강의의 ‘서비스’ 할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강의 시설과 전임 교원 확보에 있어서의 열악성은 물론이러나와 수십 년 동안 고질화된 惰性的인 分科學問의 閉鎖的 領域에 대한 고집스러운 집착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現代社會가 요구하는 다양한 人文學的 教養과 自然科學의 素養, 그리고 實用的 知識을 갖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封鎖 당하고 있다. 학과별로 세분된 전공 과목의 교과서적인 강의에만 의존하는 한 이러한 상황의 극복은 기대할 수 없다. 더우기 우리 사회는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分斷狀況에서 빛어지고 있는 이념적 폐쇄성과 민족적 同質性의 장기간에 걸친 解體, 植民地 시대 이래 계속되고 있는 제국주의적 從屬 상황 속에서의 社會經濟的·政治的 社會構造의 왜곡과 文化的 植民主義化의 弊害, 급속한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 과정에서 深化된 사회적 兩極化와 왜곡된 物質主義의 가치의 漫然 등 다양한 重疊的 矛盾을 안고 있는 사회이다. 이에 더하여 장기적으로 계속된 軍部獨裁體制 속에서 胚胎된 정치 문화의 왜곡은 정상적인 市民民主主義의 [구현, 국가와 사회의 영역 분리와 국가로부터의 시민 사회 自律性의 확보 자체를 至難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대학은 한편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批判的 기능의 活性化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政治社會化’를 통해 國民의 政治教育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대학은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自任할 수 있는 아무런 외부적·내부적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 그를 위한 노력조차도 사실상 기피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일은 '80년대 이후 社會政治的·經濟的 矛盾에 대한 自覺으로 覺醒된 학생들 스스로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 급진적인 批判理念들이 대학 자체의 구조적 폐쇄성으로 인하여 전혀 수용·재비판되거나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몇몇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듯이, 우리 대학의 人文·社會科學 학부의 編制 자체가 아직도 극히 畸形的일 뿐 아니라 그나마 기존의 편제 내에서조차도 ‘다양한’ 학문적 傾向과 立場이 균형있게 配置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대학은 오히려 사회 자체보다도 더욱 ‘불균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예컨대 거의 모든 사회과학 분야에서 우리 대학들은 세계적 普遍性을 벗어나 保守的이고 機能主義的이며 지극히 道具主義的인 학문적 경향을 固守하여 왔다. 그 결과 대학 내에서의 ‘政治教育’, ‘理念教育’ 그 자체가 곧 도구주의적인 反共教育으로 轉落한 지 오래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국제적 冷戰構造의 급속한 弛緩과 解體의 물결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脫冷戰의 國際的 흐름과 특히 현재 社會主義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격렬한 政治變動 과정을 우리의 ‘主體的’ 觀點에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의 ‘分斷構造’를 解消할 수 있는 이념적·정치적 展望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절실한 당면 과제가 대학의 능력 범위 밖의 일

1)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고, 구체적으로는 江原大學校와 慶尙大學校에서 教科課程 改編의 노력이 학교 전체의 차원에서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慶尙大學校 教育課程改編特別委員會의 教科課程 改編을 위한 研究報告書(1989.5)이다. 경상대학교 교육과정개편특별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교과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대학교육의 ‘大衆化’와 ‘實用的 要求의 增大’ 등에서 찾으면서, 그동안 우리의 대학들이 교과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대학의 ‘他律化’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드문 이러한 노력은 대학의 ‘自律化’를 위한 노력, 즉 教育民主化를 위한 大學 構成員들의 노력의 증진이 그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되어' 현실 정치 세력들의 政治的 利害關係에 따라 變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학생 세대들은 물론 국민 전체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우리의 대학은 전적으로 無感覺하거나 無能力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無責任하다.²⁾

물론 대학의 사상·이념적 역할이 단지 變革的 社會理念의 産室로 기능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보다는 무엇보다도 한 사회 전체의 歷史와 文化的 '傳統'의 보존과 계승 발전, 그리고 그에 기반한 새로운 民族의 進路의 摸索이라는 진정으로 '進步的'인 기능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이 진보적이지 못하고, 더우기 진보적인 모든 사회 思潮들에 대하여 자폐적인 체질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때에는 반드시 그 역할을 자임하는 葛藤의 理念的 代案構造가 생성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의 학계에서 인문·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영역과 심지어 자연과학 일부 영역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는 소위 '在野學術團體'들의 등장과 활발한 학술 활동은 바로 그러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³⁾ 그러나 부분적인 자기 반성과 쇄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은 아직도 자신의 자폐증을 치유하려는 노력에는 지나치게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 대학의 이렇게 완강한 보수적·폐쇄적인 체질은 오늘날 학원 내에서의 새로운 진보적 사조들을 다시금 이데올로기적으로 재단하려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대학 구성원들 상호 간의 뿌리깊은 불신과 상호 갈등을 낳고 있기도 하다.⁴⁾

5. 大學 運營의 非民主性과 閉鎖性

우리 대학의 이러한 상황이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運營 그 자체의 非民主性과 閉鎖性에 기인하고 유지되는 바 크다. 우리의 대학은 대부분의 경우 아직도 人脈과 學脈 심지어는 族閥의 人血脈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 경영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 및 낙후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특히 여러 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대학교육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私學의 대부분은 그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統制的인 교육 정책으로 인한 대학의 자율성 박탈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을 國民的 敎育機關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個人的 專有物로 생각하고 있는 대학 재단들의 시대착오적·폐쇄적 대학 운영의 책임 역시 대단히 크다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한국 사학의 대부분은 아직도 경상 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심지어는 학교 재단에 주어지는 각종의 특혜에 기생하여 이를 재산 증식의 통로로 이용해 온 사례들 또한 적지 않았

- 2) 추鍾毅 교수는 현실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關心을 정치학 교과목들이 전혀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現實問題와 연결시켜 주는' 교과목의 부재, '현실 문제에 대하여 哲學的인 解釋을 내리려는 노력'의 부재로 설명하면서 "정치학 교과과정의 전반에 걸쳐 정치·경제·철학의 有機的 連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정치학의 現實 適實性이 없다는 것은 결국 "정치학이 社會 批判的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自省의 評價는 오늘날 정치학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전반, 나아가 자연과학에까지 두루 해당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종은, "政治外交學科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대학교육(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7), pp.106~107.
- 3) 이에 대해서는 학술 단체 연합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80년대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現단계와 전망(역사비평사, 1988)을 참조. 이 책의 전반부에 수록된 각 분과 학문별 연구 동향에 대한 깊이있는 '비판'들은 바로 우리 대학에서의 학문과 교수의 현실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이기도 하다.
- 4) 예컨대 신규 교수 임용을 둘러싸고 여러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학인들 간의 반목과 갈등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인맥과 학맥에 의한 교수 충원의 관행을 고집하려는 보수적 경향과 덩실상부한 '공개 채용'의 과정을 밟으려는 진보적 경향 간의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적 학풍과 보수적 학풍 간의 대립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대학 내의 진보적 사조와 경향들에 대한 완강한 이데올로기적 裁斷의 좋은 사례가 최근 전국 총·학장 회의석상에서某대학 총장의 강연을 통해 제시되었다. 그는 "최근의 학생운동을 '맹목적인 북한주의자들의 파괴적 준동'이라 하면서 일부 사회과학 분야의 교수들이 이에 '부화뇌동'하거나 이들을 '부추기기까지'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다. 대부분의 사학 재단이 재단의 재산을 비수익성 부동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물가와 지가의 앙등 속에 그 가치가 엄청나게 증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자산이 학교의 경상 운영비의 확충을 위해 투입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사학 재단의 재정 운용 방식 때문에 최근 많은 대학에서 ‘학원 민주화’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심적인 요구 사항의 하나인 ‘大學財政의 公開’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형식적인 공개에 그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학의 재정난 타개를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 호소가 社會的 說得力을 가질 수 없다.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에 의한 학원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불법적인 청탁 입학이나 편입학의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마당에 사실상 ‘기부금 입학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사회적 인식의 공간은 없을 수밖에 없다.

총·학장을 중심으로 하는 인맥과 학맥이 뒤얽힌 大學 行政 구조의 非民主性은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더우기 오랜 기간 동안 체질화된 대학 행정의 ‘관료주의화’는 대학의 행정과 행정 기구가 ‘학문의 연찬과 교수’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적 서비스 기능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망각시키고 있기도 하다. 대학의 공간 구조 자체가 이미 이를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행정 기구가 자리잡고 있는 ‘본관’ 건물의 위용에 비해 강의실과 실습실, 실험실, 연구소, 기숙사, 도서관 등 필수 시설들의 공간은 넓고 비좁기 짝이 없으며, 더우기 각종 기자재와 난방 및 냉방 시설의 현황은 입에 담기조차 곤란할 정도의 사정에 놓여 있다. 대학 예산의 대부분은 경직성 비용 항목에 묶여 있어 학생들의 실험·실습과 도서와 교육 기자재의 구입 및 운영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도서관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대학이 거의 한 군데도 없으며, 책결상만 덩그러니 놓인 실습실 한 칸을 수백 명의 학과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대학의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대학 내의 意思決定 과정의 閉鎖性과 非民主性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

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총·학장과 일부 보직자들 혹은 재단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에 의하여 대부분의 주요한 정책들이 결정되고, 그 집행 과정은 대학 내의 행정 기구에 의해 진담되어 대학 내에서는 사실상 정책 결정 및 그 실행 과정을 감독하고 견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 최근 수년 동안 다수의 대학에서 교수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일반 평교수들이 대학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形式的인 制度만으로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대학 행정의 관료주의적인 패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간 경상 운영 예산이 수백 억 원대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 되어 있고, 대학의 행정 조직 자체가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의회로서도 행정부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적 전망이 대학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뿐이다. 우선 중앙 집권적이고 관료제적인 大學 行政에 과감한 全面的인 分權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교과과정 운영과 기타 학사 운영 전반의 권한이 하루 단위인 학부나 단과대학 나아가서는 학과에 전폭적으로 이양되어야 하고, 최고 의사 결정권을 부여받은 교수회 산하의 특별위원회가 전문적 식견과 권위를 지닌 교수들로 구성되어 학사 행정과 재정 전반에 걸친 기획과 특히 감사의 권한을 지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학사 행정 전반에 대해 학생들의 참여의 기회를 과감히 부여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일부 상층 인사들에 국한되지 않은 지역 사회 전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 지역의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대학이 이제 더 이상 정치 권력에 예속되거나 소수의 특권층이 장악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라 社會的 共有資產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전진적 조치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형식적인 참여 기회 확대는 결국 다시 관료제의 전형을 불러올 뿐이다.

6. 大學과 地域社會

외형적 팽창 일변도로 성장해 온 우리의 대학들은 그 성장을 뒷받침해 온 地域社會와 올바른 有機的 關係를 전혀 맺고 있지 못하다. 대학에 대한 지역 사회의 기대는 이제 단순히 지역 출신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졸업장을 주어 배출시키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교육의 대중화나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실용적 요구의 증대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늘날의 한국 교육 현실 전반에 비추어 대학들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계급·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大衆的이고 實用的인 再敎育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사회에 대한 대학의 서비스 기능들은 이제 그 방향에 있어서 보다 '민주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 제도 자체가 이미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온존과 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批判的 分析들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대학들이 마련하고 있었던 몇 가지의 재교육 프로그램들은 그러한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에 국한되고 있다. 그 하나는 대학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동기와 상층 지역 인사들의 특수한 신분 및 지위 과시적 욕구가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 과정 프로그램들로서, 예컨대 거의 모든 종합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 과정' 등이 이에 속한다. 대학은 기존의 시설과 인원을 '활용'하여 고액의 단기적 등록금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주로 기업인이나 정치인 및 고급 군인 등으로 구성되는 수강자들은 이를 자신의 신분·경력의 확보 및 사회적 인맥의 형성에 필요한 '사교장'으로 활용한다. 다음으로는 교사나 공무원, 기타 기업체의 증견 관리자들이 승급 등 자신의 지위 상승에 필요한 자격증의 획득 기회로 삼고 있는 특수대학원 과정이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교육대학원이나 행정대학원은 이미 진급이나 승급 혹은 보다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한 자격증 획득 코스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학은 별도의 추가적 재원의 투자 없이 기존의 시설과 인원을 활용하여 막대한 등록금 수입을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 교육'의 미명 하에 일부 대학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지런 '공개 교양 강좌'들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의 대학에 대한 주민들의 잠재적인 다양한 요구들에 부합되는 것이 아님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더우기 대학이 지역 사회에서 마치 사기업이나 다름없는 난폭한 '대자본'의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흔한 우리의 실정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 社會의 不平等 構造의 온존·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결코 그 逆이 될 수는 없다.

대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자신이 지니고 있는 多樣한 資源들을 가능한 한 지역 사회의 하층 계급·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割讓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대학 내의 연구소들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조사 연구와 공개 세미나, 공청회 등을 주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개 대중 강좌의 개설을 통해 시사·정치·경제·문화·역사·교육 등 지역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문제들과 주제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의미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이 여전히 외형적·양적인 팽창에만 몰두할 뿐 변화하고 있는 사회 현실 속에서의 大學機能의 多面的 變化 가능성에 대하여 눈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사회 자체가 지금까지의 閉鎖性을 克服하고 내부의 民主的 改革을 위한 노력에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7. 맺음말

오늘날 우리의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참으로 크고 심각하다. 그러나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대학은 그러한 변화의 내용과 의미를 앞서 포착하며 나아가 그 변화에 방향 감각을 심어 주는 知的 노력의 中心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대학은 어느 면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오히려 사회 그 자체보다도 크게 뒤져 있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 분위기가 감싸고 있기까지 하다. 대학 사회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非民主性과 사상·이념적 閉鎖性이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국가의 敎育統制에 순응해 온 과정 속에서 체질화된 他律性이 그것의 극복을 힘겹게 하고 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대부분의 우리 대학은 심각한 '등맥경화증'에 걸려 있다. 시대의 흐름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학문적 낙후성과 폐쇄성, 사지선다형의 사고에 젖은 학생들에 대한 기계적·고답적 교과과정의 끊임없는 반복, 물질 우선적 가치관의 만연과 고질적인 관료 행정의 병폐, 학맥·인맥·혈맥에 의존하여 특권적 혜

택 속에 안주하려는 체질화된 비민주적 타성, 사회의 모순과 불평등 구조의 온존·강화에 기여하거나 그에 편승할 뿐 이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려는 의욕을 갖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무기력증, 권력과 재력에 순응하며 기득 이익에 안주할 뿐 사회 기층 대중의 변화하는 요구에 무감각한 반민중성 등이 모든 병폐들을 대학 사회가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코 물질적인 재원의 투자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지나칠 정도의 물질적 자원을 지니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학 사회 자체가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외면하거나 가리려 하지 않고 自己反省的 態度로 이를 직시하는 일일 것이다. 大學의 民主化도 사회 민주화의 중요한 일부이며, 어떠한 점에서는 대학이 그 社會的 位相 때문에라도 이러한 요구를 가장 먼저 제기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의 민주화는 다시 社會民主化의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